



기금 정책 토론회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일 시 | 2016년 8월 9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 프 로 그 램 】

시 간		내 용	비고
10:15~10:30	15'	등록	
10:30~10:40	10'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사회 :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40~11:00	20'	발제1. 사드(THAAD)와 중국 안보	박휘락 국민대 교수
11:00~11:20	20'	발제2.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11:20~11:30	10'	토론1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1:30~11:40	10'	토론2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11:40~11:50	10'	토론3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11:50~12:05	15'	토론 및 종합토론	

【 목 차 】

발 제 문

- 사드(THAAD)와 중국 안보 ————— 09
박 휘 락 (국민대 교수)
-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 ————— 17
송 대 성 (前 세종연구소장)

토 론 문

- 토론 1 ————— 35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토론 2 ————— 39
이 정 훈 (신동아 편집위원)
- 토론 3 ————— 43
김 정 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발 제

[발제 ①]

사드(THAAD)와 중국 안보

박 휘 락
국민대 교수

1. 서론

한미 양국군이 2016년 7월 8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邀擊)하는 무기 중 하나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 중국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7월 9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고, 중국 국방부는 “우리는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월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과 관련된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환구시보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대한(對韓) 제재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¹⁾

최근에도 중국 공산당 기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8월 3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의 지도자(領導人·박근혜 대통령)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러 간에 충돌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²⁾ 중국은 현재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듯이 한국을 하대(下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들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전달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보복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더욱 부끄럽게도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신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글을 기고하면서 우리 정부를 폄하하고 있다. 2016년 7월 25일 『인민일보』의 ‘국제논단’ 코너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충환씨가 경북 성주군 주민 이름으로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실었고, 7월 31일자 『인민일보』의 ‘국제논단’ 코너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제목으로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가 기고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은 8월 3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라면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 『조선일보』 (2016년 7월 11일), p. A4.

2) 『조선일보』 (2016년 8월 4일), p. A1.

그 동안 한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에 시달려왔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거나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중국 편을 든 주장이 많았고,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거나 전자파가 너무나 유해하여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루머들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년여 걸친 논란을 통하여 이들의 주장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성주에서도 점점 반대 시위가 진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일부인사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일부 조선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이어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은 간섭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반안보 선동가”들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들은 철저한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반대하였고, 나아가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대하였다. 이들은 오로지 현 정부의 붕괴를 조장하고, 한국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 중 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이들은 암이나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시위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의 존재와 해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영향력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중관계의 본질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종주국으로 대접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모화정신이 존재하는데다가 2008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고, 특히 최근에 경제관계가 활발하여 한국과 중국이 동맹관계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인식이 현 상황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 동맹관계와 동반자 관계

안보협력 중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가 ‘동맹’(同盟, alliance)인데, 이것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함께 방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흥망을 함께한다는 강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경제동맹, 가치동맹, 복합동맹 등의 용어도 사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맹은 “잠재적 전쟁공동체”(latent war community)이다.³⁾

그런데 동맹은 상대국가의 안보역량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동맹국의 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되는 위험도 지니고 있다. “포기-연루 모델”(Abandonment-Entrap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원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려들어 가거나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려질 수 있

3) Robert E. Osgood,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pp. 17-21.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56호(2012), p. 185에서 재인용.

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동맹의 이점은 향유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된다.

중국이 추진해오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또는 “동반자” 외교가 동맹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것은 동맹과 달리 적이나 공통의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국가 간의 상호협력만을 강조한다. 이것은 동맹과 중립의 중간이거나, 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고, 동맹과 다르게 상대국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이나 의무가 없다. 이것은 중국이 냉전시대에 견지해온 비동맹 정책에 뿌리는 두어 발전된 형태로서, 중국은 1993년 브라질과 동반자관계를 시작한 후 2014년 6월 현재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해두고 있다.⁴⁾

중국과 유사한 동반자 관계는 북대서양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나토국가들은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공산권에 속했던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이 바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은 동맹에 해당하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지만 나토의 다른 활동에는 참여시킨다는 내용으로서,⁵⁾ 중국의 동반자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실제 적용 사례

한국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이후, 야기된 주요 안보 관련 사태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인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전 시대에 존재하였던 남방 3각관계(한국-미국-일본)와 북방 3각관계(북한-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한국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신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원론만 되풀이하였고,⁶⁾ 러시아는 자체 조사단을 보내어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였으면서도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채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6월 1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오직 하나의 버전(version)만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였다.⁷⁾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무기로 방해하였고, 결국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에 그쳤다. 그 내용에서도 유엔 스

4) Feng Zhongping and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Observatory Working Paper 8 (June 2014), pp. 18-19.

http://fride.org/descarga/WP8_China_strategic_partnership_diplomacy.pdf(검색일: 2016. 8. 5).

5)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외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1호(2010), p. 5.

6) 『조선일보』 (2010년 5월 31일), p. A1.

7) 『조선일보』 (2010년 6월 19일), p. A1.

스로에 의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⁸⁾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반응이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2008년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⁹⁾ 중국 외교부의 공식성명을 분석해볼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 이전에는 “객관적인 사건 조사”를, 이후에는 “각국의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하였다.¹⁰⁾ 중국의 주요 일간지인 『인민일보』는 천안함 폭침 이틀 후 한차례 사실보도를 한 이후 한 달간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였다.¹¹⁾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중국의 태도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에서도 반복되었다.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 사건 때에 보여준 내용과 유사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전제로 관련 국가들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문제의 원인이 분쟁지역 내에서 한국이 실행한 군사훈련 때문이었음과 중국은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분쟁의 무력해결을 반대하는 것이었다.¹²⁾ 양제츠(杨洁篪)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2010년 12월 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은 남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¹³⁾ 중국은 남북한 대사들을 동시에 불러서 연평도에 대한 상호자제를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논평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다.¹⁴⁾

4. 사드 논란과 중국의 반응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 관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주권국가

8) 외교부 홈페이지, 이슈별 자료집(한반도 평화체제).

http://www.mofa.go.kr/trade/hanbando/peace/data/index.jsp?menu=m_30_20_20&tabmenu=t_2&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0909%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7343 (검색일: 2016년 8월 1일).

9) 박홍서, “게임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중심으로,” 제91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자료(2011), pp. 169-171.

10) 한광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비교,” EAI Security Briefings Series No. 3(2010), pp. 9-10.

11) 유세경 외,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6호(2010), pp. 137-138.

12) 정재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2012년, 1992년 그리고 1972년으로의 회고와 평가,” 『중국 근현대사연구』, 제56집(2012), p. 35.

13) 『조선일보』 (2010년 12월 2일), p. A1.

14) 『조선일보』 (2010년 12월 20일), p. A4.

임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고 전해진다.¹⁵⁾ 이후 중국 관리들은 시 주석이 요구한 사항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는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014년 11월 26일 국회에서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km...”라고 말하면서 사드 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⁶⁾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도 없던 사드배치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역시 16일 개최된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¹⁷⁾

중국의 관리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반대의 입장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판단해볼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신 추측하는 바와 같이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거나 그 레이더가 중국 핵전력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미 육군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한 무기로서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상대방 탄도미사일을 “비행 최종 종말단계”(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에서 타격할 수 있고,¹⁸⁾ 사거리가 200km 정도에 불과하여 발사 직후부터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타격할 수가 없다.¹⁹⁾ 사드가 사용하는 X-밴드의 AN/TPY-2 지상배치레이더(GBR: ground-based radar)도 1,000km 정도의 탐지범위만 가질 뿐이고,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정보를 전달받아 ‘추적’하여 사드 미사일이 요격하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중국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없다.²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한미동맹 균열을 의도하거나²¹⁾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²²⁾

5. 사드 논란에 관한 중국의 입장 분석

한국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8월 25일 이 관계에 합의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제·문화 교류 중심의 양국 관계를 정치·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²³⁾ 청

15)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p. A1.

16) 추인영, “대북인권결의안 및 사드 한국배치 '반대',” 『뉴시스』 (2014년 11월 26일).

17)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p. A1.

18) U.S. Missile Defense Agency 홈 페이지. <http://www.mda.mil/system/thaad.html>(검색일: 2016년 8월 1일)

19)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2014년 12월), p. 27.

20) Ibid.

21)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검색일: 2016년 8월 4일).

22)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제70집(2014), p. 265.

23) 『조선일보』 (2008년 8월 26일) p. A1.

와대 국가안보실에서 2014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북핵과 통일문제 등 한반도의 핵심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반면에 TTP에 대항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는 가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한국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스스로가 이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둔 것이 없고, 1993년 브라질과 동반자관계를 시작한 후 2014년 6월 현재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해두고 있듯이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인 2010년에 북한의 어뢰정기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북한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백주에 포격하였지만, 중국은 전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태도에서 미치지 못하였다.

대신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체결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사드 배치에 관하여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가 방어용의 무기이고,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명백함에도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해서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의하여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한국은 언젠가는 병합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에게 동반자관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베풀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혜택에 대한 대가, 즉 교환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동반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혜택이거나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보상의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면, 중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을 요구해왔을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자 지금과 같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6. 결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인 것으로, 특히

24)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 p. 87.

안보분야의 협력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50개 정도의 국가와 이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려온 것도 아니다. 2008년 한국과 중국이 이 관계를 추진한 이후 발생한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중국은 전혀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해온 것은 일방적인 기대나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의 성격이 크다고 봐야 한다. 한미동맹과 동등한 비중을 두어 고려할 정도의 한중관계가 아닌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다더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취한 '3 No'와 같은 소극적 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일 3국간의 안보적 불신을 조장하고자 중국이 이와 같이 반대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²⁵⁾ 중국 정부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데 대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였지만²⁶⁾ 일본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단호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한국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좌고우면(左顧右盼)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반성해봐야 할 사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가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 촉발 또는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6월 스캐퍼토리 사령관이 본국이 사드 배치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모두 탐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이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전달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의 논란을 통하여 사드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고, 레이더의 성능도 매우 과장되게 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에서의 논란은 상당부분 진정되었지만, 중국의 반대는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안보관련 사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부정확한 루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이 한중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내부에서도 사드가 그 정도로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이 반대하는 명분의 설득력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는 반발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⁷⁾는 추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내부가 단결되어 있느냐 분열되어 있느냐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5)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p. 337.

26) 『연합뉴스』(2014년 10월 23일).

27) 이기완(2015), p. 340.

[발제 ②]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

송 대 성
前 세종연구소장

1. 문제 제기

금년 1월 6일 제4차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북한은 국제적인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국제정치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 법칙”이 그 핵심이다. 북한의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핵무기·미사일 보유에 대한 사생결단하는 집념은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 미국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반작용으로 부상되고 그 결과 ‘사드 한국 배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에 사드 배치’라는 최종 결정이 발표되자 국내·외적으로 일파만파의 갈등들이 노정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드배치의 필요성 여부, 효율성, 배치부지선정관련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 순수한 안보이슈의 정치화·이념화 등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나 있다. 국제적인 갈등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라는 갈등이다. 특히, 중국은 단순한 견해차원의 반대가 아닌 행동 차원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고압적이고 의미심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에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근본 인식,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핵심 이슈들,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핵심 저의, 한국의 대응책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북한 핵·미사일 (창 創) vs. 사드 (방패 防牌)

한국에 사드배치는 사실상 2013년 2월 12일 11:57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그 후 북한의 극히 도발적인 행태들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온 세계가 그렇게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실시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4.9 지진 강도에 해당하는 6~7kt 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⁸⁾ 본 핵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척된 핵과 비슷하거나 그것

28) 미국 Stsanford대학의 Siegfried S. Hecker 박사는 7~14kt위력을 주장.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 10) 0.8kt, 2차 핵실험(2009. 5) 2~6kt이었음.

의 1/2에 해당되는 잔혹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⁹⁾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자체만으로도 가공스러운 도발적인 행위였는데 핵실험이후 북한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였다. 핵실험이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3. 3. 5), “핵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핵 퍼부으면 불바다 되게 되어있다” (2013. 3. 7, 김영철 정찰총국장),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려라”(2013. 3. 9, 김정은 장재도무도 방문 시),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2013. 3. 10 노동신문), 전방 황해도 해안: 해안포문 개방, KN-02 단거리 미사일 배치 (2013. 3. 11),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리면 벌초해 버릴 것” (2013. 3. 12 02:00조평통),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내일 당장인가 하는 폭발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 (2013. 4월 초, 북한군 총참모부대변인), “우리의 무자비한 작전이 이미 최종 승인됐으며, 이 사실을 미국 백악관과 패타곤에 통보한다” (2013. 4월 초 조선중앙통신),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2013. 4. 8),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疏開) 대책을 세워야 할 것” (2013. 4. 9,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김양건) 대변인 담화), “상전과 주국의 역겨운 입맞춤,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 (2013. 5. 11, 한미정상회담 후 조평통),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신형 유도로켓 단거리 유도탄 4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 (140여 km에 낙하, 2013. 5. 18-19),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레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된다.” (2013. 11. 22 서남전선사령부 성명) 등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협박의 용어들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위협하였다.

제3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강도 높은 협박과 함께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탄 등 핵폭탄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4. 5. 24)라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핵 보유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핵실험이후 이러한 북한의 고강도 위협은 한미 간에 그 위협들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고강도 협박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들을 마련해야만 했었다.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군은 (1) 도발원점, (2) 지원세력, (3) 지휘세력에 대해 강력하고+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2013. 3. 6, 정승조 합참의장), “한국을 수호키 위한 만반의 태세 갖추고 있다” (2013. 3. 7,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한미합동 키리졸브 훈련 실시 (2013. 3. 11-21)³⁰⁾ 하면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내밀한 대응책 마련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의 강도 높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책들이 물밑에서 논의되다가 물위에 공식적으로 부상된 것은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Curtis Michael Scaparrotti) 대장에 의해서였다. 그는 2014년 6월 3일 국방연구원(KIDA)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고고도 요격체

29)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서 실험된 핵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2004년 미국 국방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참고함으로써 알 수 있음: 미국국방성은 서울 용산에 15kt(히로시마에 투격한 것과 유사함) 투척 시, 반경 1.8km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녹아서 수증기/가루로 증발되고, 4.5km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버린 휴지조각처럼 되어 만지면 부서지는 재로 변하며,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총 125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모의시험 결과를 동영상으로 방영하고 있음.

30) 총 12,800 병력 참가(한국군 1만+해외미군 2500 +주한미군 300): F-22 Stealth 기, 전략폭격기 B-52, 이지스함 (라센함 9750t), 피츠체랄드함 등) 참여.

계 미사일(THAAD)의 배치 필요성에 관한 소요를 미국 국방부에 제기 했음”을 밝혔다.³¹⁾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창(創)에 대해 사드라는 방패(防牌)를 구비기로 결정한 셈이다.

한국의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 분명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다가 스캐퍼토티 사령관의 공식적인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8일 “한미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키 위해 맞춤형 연합작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한국국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7월 8일 한미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3. 창(북한 핵·미사일)과 방패(사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

1) 북한의 비핵화: 대화/협상/한반도 평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케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갈구하면서 중국에게 직·간접적인 간청들을 수없이 했다. 중국의 북한핵관 관련된 반응은 실효성이 동반되지 않는 외교적인 언사 혹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발질하는 주장들로 일관했다. 그 단적인 예는 2013년 8월 20일 미국 펜타곤에서 개최된 미국-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주장 내용을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 먼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중국〉“북핵문제는 해결의 창문이 이미 열려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줄여야만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에 기대서는 안 된다. 북한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유훈을 계승할 뜻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3자 혹은 6자회담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진정한 협조는 필수적 요소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사실상 중국의 비핵화 의지 및 실천적인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³²⁾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분명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느끼는 위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중국의 북한 비핵화 신념과 실천력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유엔이 대북제재를 함에 있어 관련국들 간 합

31) <https://namu.wiki>커티스> 스캐퍼토티(2016. 8. 6일자 검색)

32) Aiden, Warren, (eds.),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Weapon Strategy: The Promise of Pragu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pp. 155~56.

의의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그 주원인은 중국 때문임을 201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는 “강력한 안보 리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만 한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는 지지하지만, 대립을 부추기거나 한반도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했다.³³⁾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에서 대립이나 혼란이 없이 북한을 비핵화 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올인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본 주장은 결국 북한과 대립을 해서도 안 되고 북한과 갈등을 동반하는 혼란을 가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항구적인 핵보유국 선언”을 했는데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주장이다. “북한정권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할 것인가?”하고 절박하게 압박하여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텐데 대결이나 혼란을 피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함을 주장하는 중국의 태도가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이다.

필자는 후진타오 시절 중국 국무위원으로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한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과 2016년 5월 17일 한중친선협회 주최 만찬에 동석하여 “당신은 현재 중국이 주장하고 실제 이행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방안에 의해 북한이 결과적으로 비핵화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에 대한 그의 답은

“북한 핵이 포기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과제다. 복잡한 한반도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을 붕괴로 몰면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붕괴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³⁴⁾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전임 정권의 외교담당 총수인 다이빙궈의 주장은 현 중국정부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의 주장은 (1) 현재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행하고 있는 제재방안에 의해 북한이 비핵화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2)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3)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해결을 해야만 하고, (4)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과 관계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와 연계시켜 풀어야만 하며, (5)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압력은 북한붕괴로 이어지는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 제재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기본 태도를 간파하고 있는 북한은 안심

33) 《조선일보》(2016. 1. 19일자 “포위망 넓히는 ‘北核제재 3대 축’”) 참조

34) 2016년 5월 17일 18:30-21:30간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 호텔에서 한중친선협회 주최로 개최된 만찬석상에서 필자의 질문에 대한 다이빙궈의 답변 내용임.

하고 노골적으로 유엔제재 결의 사항들을 위배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북한제재”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³⁵⁾

2) 사드 문제: 한국에 대한 초강수 협박/압박으로 본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한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제는 한국에 대해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협박과 압박을 총동원하여 ‘사드배치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중국정부가 직접 협박을 하기도 하고 관영매체들을 동원하여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직접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우려한다” (2015. 5. 30 제14차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군부총참모장, 한민구국방장관에게), “사드 때문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군비경쟁 때 한국안전이 보장되는지 고민해보라.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유엔결의안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2016. 2. 23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방문 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 국익에 중대한 침해” (2016. 6. 7 중국정부),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안정을 잠식할 것임” (2016. 6. 7 인민해방군 쑨제궈 부참모장, 군사력 과시·협박: 항모 (라오닝(遼寧)호 전투기 대거 탑재 중국 관영 CCTV에 공개 (2016. 8. 5)), “사드 고집 땀 대 북공조 못한다” (2016. 8. 5 중국언론)³⁶⁾ 등이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에 가하는 압박들을 살펴보면 인민일보의 “한국이 사드를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차원의 대북제재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 (2016. 8. 5일자), 한국정부와 한국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한 마디로 기담괴론(奇談怪論)·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다. 백번을 양보해 한국이 설령 중국의 안보를 생각한다 해도, 한국은 군사문제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한국이 방종하는 마음으로 산(山:미국을 의미)에 기대어 마음대로 한다면 지나치게 경박한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해 필리핀, 대만에도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2016. 8. 6일자),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서울이 도쿄로 기우는 것이 베이징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가 탐지한 정보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작된 정보공유가 점차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저올 수 있다.” (2016. 8. 6일자, 중국 전략미사일부대 제2포병 출신 군사전문가 쑹중평(宋忠平) 주장을 게재), 차이나 데일리(중국관영 영자지):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 중국은 안보에 대한 우려로 한·미·일과 함께 대북 유엔 제재를 해 왔지만 사드가 이런 연합전선에 죽음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과거 이런 분열의 틈바구니에서 자라왔고 북한

35)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 기파랑, 2016, pp. 98~99.

36) “中언론 “사드 고집땀 대북공조 못한다”협박”(《조선일보》 2016. 8. 6일자 참조)

으로선 다시 이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16. 8. 5일자 사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문제를 두고서는 정부가 직접 혹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하여 고강도 협박과 고압적인 태도를 점고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평화로 풀어야만 한다고 늘 강조하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문제는 협박과 고압적인 자세로 풀겠다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4. 사드배치 핵심 이슈

1)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 (국가안보차원 방어조치)

한반도 사드배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과 동시에 2,000여기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그 근원(根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가 능성 점고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안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국방방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케 되었다.

적대국간에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다른 상대방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적대국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핵 없는 맨몸으로 대결을 하여 비참한 멸망을 자초하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예 혹은 인질이 된다는 것이 정론(正論)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불량국가 북한을 상대로 핵전쟁을 치루든가, 아니면 인질/노예가 되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운 좋게 세계 최고 군사강대국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빌려 노예/인질 됨을 방지하는 지혜로운 방책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한국에 사드 배치다.

한국에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역량 중 차단역량(Deterrence Power) 증대조치다. 차단역량이란 적의 도발로 인해 다가오는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국가안보정책은 다가오는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단역량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그 차단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안보정책이다. 한국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단역량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국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단이다.

2) 한미동맹의 기본 역무: 사드배치

한미양국은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의 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제2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및 전선배치라는 가공할 외부 위협 등장에 한미양국은 본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고 합의하여 한국에 사드배치라는 공동방어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한미연합자산으로

장치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당당한 국제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취하는 공동안보조치다. 한미양국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63년 전에 합의한 동맹조약에 의거 실행하는 국가안보조치다.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 사드를 한국 땅에 배치함은 동맹조약의 구체적 내용의 이행이요 당위적인 조치다.

3) 사드성능의 우수성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개발한 고고도(高高度)에서 적(敵)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방어무기체계다. 사드는 목표물타격을 위해 포물선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낙하고도 40~150km 사이에서 요격하여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최첨단 방어무기다. 사드는 패트리엇(PAC-3)을 중심으로 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의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TPY-2는 120도 전방 250km의 모든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사드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드의 특징

사드종류	제원,구성,성격	특징
사드요격 미사일	성격	종말단계 상층방어 미사일
	사정거리	최대 200km (최대요격고도 150km)
	제원	길이 6.17m, 직경34cm, 최대속도 마하8.24 (음속8.24배)
	가격	미사일 1발당 110억 원, 1개 포대는 6조 원 이상
	구성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
사드 AN/TPY-2 이동식 레이더	최대탐지거리	전진배치용 2000km, 종말단계요격용 1000km미만
	크기	9.2㎡ (수송기, 트레일러 등 수송 가능)
	구성	송수신 소자 2,534개
	특징	강력한 전파로 2.4~5.5km 내의 차량과 항공기, 전자장비 훼손 가능, 레이더 방향전환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1발에 11억 원 정도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을 포함 1개 포대 가격은 총6조 5천억 원에 이른다. 핵이나 생화학탄두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직격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사드의

작동순서는 ① 사드의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 감지 후 타격지점 계산과 사드 미사일 할당과 목표지점 전달 → ② 사드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 → ③ 탄두, 추진 체 분리 후 요격순간까지 목표물 추적 → ④ 탄두는 적외선 센서로 유도되며 탄도미사일을 충돌하면서 격파한다. 그리고 30분 안에 재장전이 가능하다.

사드의 실제 유효성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0~150km 고공에서 대부분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로 알려져 있다. 본 사드의 속도는 마하 15~16 (소리속도의 15~16배)로서 낙하 시 마하 8~9 최대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보유 무수단을 비롯하여 이보다 비행속도들이 느린 스커드-B (사정거리 300km), 스커드-C (500km), 노동(1,300km) 등 북한 보유 모든 미사일들을 실효성 있게 격파할 수 있다. 단, 이동발사대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북한의 개량형 미사일 KN-08과 SLBM (잠수함발사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0km이상 고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11번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99% 격파라는 놀라운 효율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사드의 실효성 문제는 지금까지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고공 미사일 방어용무기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00%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하여 사드가 필요 없다는 ‘사드무용론’은 있을 수가 없다. 가택에 침입하는 강도를 그 가택주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100% 강도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총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택과 총기가 구비되어있지 않는 가택과는 그 안전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³⁸⁾

4) 사드의 유해성 여부

사드는 안전성 혹은 유해성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되었고, 이미 사드를 배치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과학적인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안전성은 다음과 같다. 사드보다 2~3배 강한 전자파를 발취하고 있는 그린파이 레이더 (Green Pye Rada)를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허용치의 4.4% (0.266w/1m) (*허용치: 6watt/1m)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드는 30m 앞에서 0.133~0.088watt/1m로서 허용치의 1/6~1/7 정도일 정도로 안전하다.³⁹⁾

이미 사드를 배치해 놓은 지역인들 안전성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괌 지역 미국의 하원위원 매들린 보달로(Madeleine Z. Bordallo)는 “괌 지역에 사드배치 내가 건의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소음민원은 한 번도 없었다. 2013년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했다.⁴⁰⁾

37) 미국 하원 미사일방어(MD)·전자기파(EMP)코커스 의장인 트렌트 프랭크스는 “사드는 첫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면 두 번째 미사일은 스스로 폭발하며, 만약 첫 미사일이 목표물을 못 맞으면 두 번째 미사일이 타격하는 방식이다. 미사일당 적중률은 99%다” (2016년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더블트리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시 주장)

38) 송대성, “창: 방패: 북핵, 사드(THAAD)로 막는다” (『자유마당』 2016. 8월호 vol. 85, pp.31~32)

39) “상향 직진만하는 사드 빔... ‘고출력 불안감’ 해소가 관건” (《조선일보》 2016. 7. 14일자 참조); “1.5km 떨어진 마을 전자파 문제없어, 국내 전자파법·WHO 안전기준 충족” (《문화일보》 2016. 7.14일자 참조)

40) “인터뷰 자청한 보달로 괌 미 하원의원 “사드배치 후 소음 민원 한차례도 없어”(《중앙일보》 2016. 7. 20

미국 애리조나주 7선 의원이자 미국하원 군사위원인 트렌트 프랭크스 (Trent Franks)는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만약 군이 허용한다면 사드를 집 뒤뜰에 둘 것이다. 사드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의 사격통제 또는 레이더가 새를 죽이고 과일에 좋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사드는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완벽히 안전하다’는 각종 지표가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방출범위는 아주 작고, 미국에서는 음식을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 특정범위의 전자파 방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주장이다.”⁴¹⁾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는 그 안전성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하여도 좋을 정도로 유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검증이 된 셈이다.

5. 중국의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 저의

1)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 강요: 한국 길들이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고압적인 반대압력 행사를 자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전통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세계관과 평화관 때문이다. 긴 역사 속에서 중국 평원을 자리 잡고 동양의 대국으로서 행사해 온 중국 한족은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세계관과 평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세계관과 평화관은 서방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것들과는 상이한 세계관이요 평화관이다.⁴²⁾

중국의 세계관은 소위 ‘중원사상(中原思想)’에 입각한 세계관이다. 중국(中國)이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초강자(超強者)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중심지역(中心地域)이며, 중국변방에 접경지역(接境地域) 및 주변지역(周邊地域)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지역과 근접지역 및 변방지역의 관계는 소위 ‘사대자소(事大字小)’로서 ‘소는 大를 섬기고, 大는 小를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일자 참조. www.mnews.joins.com 검색 2016. 8. 7)

41) “프랭크스 미하원의원 “사드, 집 뒤뜰에 두겠다...인체 무해 주장” (2016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 참조).

42)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마누엘 월레스타인(Emmanuel Wallerstine)의 세계체계이론 (World system Theory)에 입각한 세계관: 세계체계이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위 서구 민주화 된 국가에 속하면서 국민소득(GDP)이 높은 나라들을 핵심국가(核心國家, Core Country), 경제적인 빈곤국가에 속해있으면서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미발달 된 나라들을 주변국가(周邊國家, Periphery Country),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속해있는 나라들을 중간주변국가(中間周邊國家, Semi-periphery Country)라고 분류하면서 중간주변국가들과 주변국가들이 중심국가를 다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세계는 바람직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 한편,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관: 핵심국가들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주변국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민주주의 적이고 비평화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에 自由民主主義를 擴散시킴에 두고 있음.

세계관이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한반도 남북한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접경 혹은 주변지역에 위치해있는 한국은 중국을 섬기는 미국과 하루 빨리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는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한 그들의 세계관을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중국의 평화관도 형성되어있다. 중국의 근접지역이나 변방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섬기는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평화가 오고, 중국은 근접국이나 주변국들을 사랑함으로써 평화가 온다는 평화관이다. 본 중원사상에 입각한 세계관과 평화관은 중국 중심 유교문화(儒敎文化)가 창출한 세계관과 평화관이다. 중국의 평화관에 의하면 중국의 요구사항에 고분고분한 북한은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주변국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거역하는 한국은 동양평화에 역행하는 주변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사드문제로 중국이 한국에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행태는 그들의 평화관으로서는 중국이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증진 행태로 해석한다.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의 핵심내용은 이 지구촌의 문화는 그 질이 높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화(華)’와 그 질이 낮고 미개한 ‘이(夷)’로 대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華의 중심은 中國이고 지역적으로 중국과 멀어질수록 夷의 질이 짙어지는 권역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관이다. 본 세계관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구사람들은 미개(未開)하고, 인간다운 예의(禮儀)를 잘 모르며 미발달된 사람들로 평가 된다. 본 중원사상에서 평화관은 서구세력들의 아시아 점유를 차단시키고 사대자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관이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은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서 중국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스며있으며 이러한 중국인들의 의식구조가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에 고압적인 자세로서 표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이 현재 한국에 강하게 강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강요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이 중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처신을 한 어느 정도 한국 책임도 있다. 한국은 중국의 세계관이나 평화관 그리고 중국의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 분명한 이해 없이 대중국 정책을 구사했다. 한국은 남북분단 역사 속에서 중국은 어떤 중국이며, 한국전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냉정한 역사적 평가 없이 가볍게 중국을 접근한 책임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으로 이동하면 무엇이 잘못인가” (반미친중적인 자세), “향후의 세계는 전략적 파트너 중국과의 세계” (중국경사적인 외교정책),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면 한국이 살길이 없다” (지나친 중국 경사론),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 “언제까지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 것인가?” (반미사상),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반미친북/친중),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 (반미친북/친중) 등을 주장하면서 한국 스스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에 복속(服屬)되어지는 행태들을 표출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한 책임도 있다. 그러한 행태는 일부 국민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오랜 전통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과 평화관 그리고 그동안 주체성 없

이 중국에게 굴종적인 행태를 보인 일부 한국의 정치지도자 혹은 일부 국민들의 행태들이 복합되어 사드문제와 관련 고압적인 자세를 표출시키고 있다.

2)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주도권 경쟁 →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服屬)코자 현재 지구촌은 G2의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협조와 화합의 시대를 벗어나 갈등과 투쟁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조의 관계를 갖든 갈등의 관계를 갖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구촌에서 수많은 협조의 소재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소재들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갈등과 투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갈등의 소재들 중에서 현재 크게 부상되어있는 주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중국 간 갈등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하고 있으며, 가장 붐비는 海路 중 하나다. 남중국해에서 갈등의 표출은 어마어마한 자원매장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다. 1960년대 후반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300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인접국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영유권들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남중국해는 석유 2,130억 배럴(중국 60년간 쓸 수 있음), 천연가스 3조 8천억㎥(중국 146년간 사용), 가스 하이드레이트(중국 130년간 사용)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매년 4만 여척 선박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는 항로의 핵심길목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고조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그 핵심요인이다.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로 만들고자 암초와 산호초를 이용 인공섬을 건설키 위해 착공을 하고 2016년 완성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7곳이다. 남중국해에는 750여개의 작은 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이 산재해 있다.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175개 섬(베트남 24개,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이시아 6개, 대만 1개를 실효지배하고 있음), 암초, 산호초, 모래톱이 있다. 파라셀제도는 130여개 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은 작은 암초가 면적 75,000㎡ (축구경기장 14배) 2개의 항구와 헬기 이착륙장 스프래틀리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가 거대한 섬이 되고 있다. 거대한 암초에서 30km 떨어져있는 본 암초는 만조 때 높이 60cm정도 드러나는 작은 바위섬 (중국 하이난섬에서 1,000km,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480km, 말레이시아에서 550km 떨어져 있음)이며, 인공섬 길이는 3,000m, 폭은 200~300m다.

미국은 2015년 11월 4일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행동수칙”으로 삼으려고 했음). 2016년 6월 3~5일 상그릴라대회에서 애슈턴 카트 미국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고립의 만리장성(Erecting a Great Wall of self-isolation)을 쌓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케리는 금년 6월 6일 미중전략경제대화 석상에서 “그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규탄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인도도 비호를 했다. 금년 6월 8일 미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Narendra Damodardas Modi) 총리는 미국 의회연설에서 “미국-인도 간 안보협력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양국관계강화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 까지 평화를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지하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남중국해 근접 국가들 간의 갈등과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당사국간에 해결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주장하면서 다자간 회의에서 논의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금년 6월 3~5일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 (쌍그릴라대회: 싱가포르)에서 중국 측(중국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관유페이(關友飛))은 “미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횡행(橫行)의 자유’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설전을 벌리면서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의 소재임을 명백하게 했다. 지난 6월 6일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양제쯔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사안은 관련 국가들 끼리 해결할 문제로 중국은 영토주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진영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심각한 세계적인 갈등이다. 남중국해 갈등은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인도라는 반 중국 포위망(包圍網)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국 중심의 반 중국 포위망을 어떤 형태로든 파쇄(破碎)시켜야만 할 형국이다. 중국은 그 파쇄의 고리로서 ‘한국에 사드배치 철회’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 같다. 미국과 정면대결 하는 대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맹방인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전방위적(全方位的)인 초강수의 압박을 가하여 한국의 정치권과 한국 사회를 ‘사드 배치 찬성’(친미국) vs. ‘사드배치 반대’(친중국) 양강 구도로 분열시키면서 한국을 미국 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학자들, 전직관료, 정치인, 한국국민들 중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선정하여 중국의 주장들을 대변케 하고, 친중국전선(親中國戰線)을 형성시키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에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정권이 집권하면 그 정권은 미국진영에서 이탈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포석으로 사드 문제를 고도로 정치화시키고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간의 갈등에서 미국진영의 반 중국 연결고리를 절단하는 고리파쇄 목표로서 한국을 선정하고 고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압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의 핵카드/불량국가 속성: 중국이익에 최대한 활용

중국과 북한은 지난 역사 속에서 때로는 결속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했지만 긴 역사적인 관계는 특별결속관계다.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중국의 맹방형제국가이며, 북한이 스스로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을 먼저 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⁴³⁾

중국은 북한의 핵카드와 불량국가(Rogue State) 속성을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이용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방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중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조종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려놓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하면서 북한을 조종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연계된 복잡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은근히 연계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가 결정되자 미국과 한국에게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에게는 중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한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게 된 그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책임추궁은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렬하게 비난하면서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불량국가 속성을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고립무원인 불량국가 북한에게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야기되자 이를 제일 좋아하는 북한을 100% 잘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약 올리기 위해 북한이 계속 위배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들을 눈감아주면서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이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북한의 불량성은 더욱 제고되고, 북한-중국 간 결속은 더욱 강화됨을 잘 알고 북한의 불량성을 멋지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은 북한의 불량성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도전성을 제고시켜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마치 특공부대처럼 북한을 이용할 것이다. 중국의 한국 압박은 북한의 도발성을 제고시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의 반미적인 불량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 반대라는 주제를 호재로 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 미국의 최첨단정예장비에 대한 두려움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무기”라고 한국과 미국 측에서 수없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미국과 한국 측의 설명을

43) 필자가 중국을 방문할 시 특히 중국의 원로층들은 북한-중국관계를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형제지국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먼저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먼저 버릴 수 없다”는 관계로 해석하는 주장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음.

“기담괴론(奇談怪論)”이라고 몰아치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미국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들이 각 분야별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뒤쳐져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 특히, 국방안보분야에서 첨단정예무기들 개발 및 성능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중국은 뒤쳐져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뒤쳐져있는 첨단과학무기들에 대한 불안감을 포지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에 대해 중국은 실제로 두려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월등히 앞선 하나의 첨단장비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세계전사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미국과 중국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미국장비를 코앞에 배치함에 대한 중국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드 배치 철회라는 한국 압박 카드로 나타나고 있다.

6. 한국의 대책

한국에 사드배치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근본적인 저의 4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저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들을 구사하는 것이 한국의 대책이다. 따라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저의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사드배치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가해지고 있는 압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세계관과 평화관이다. 제Ⅱ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들의 맹주들이 높게 올린 깃발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국가발전들을 모색하였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맹주들을 따라간 나라들, 사회주의/공산주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중국이나 소련을 따라 간 나라들, 혼자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양 진영을 비판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들을 취한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다.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이미 역사적인 심판이 내려져있다. 꼭 같은 민족, 꼭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 남북한은 각기 다른 선택을 했었고 그 선택에 대한 준엄한 결판이 나왔다. 중국이라는 깃발을 따라 달려간 몇몇 제3세계의 국가들과 북한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재음미하여야만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의든 타의든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70여 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피땀 어린 역사를 창출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꽃방식’을 차지하고 있다. 멸절한 좋은 꽃방식을 버리고 ‘X방식’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꽃방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나라들과 단합하여 X

방석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거부해야만 한다. 우리 혼자 힘이 모자라면 꽃방석주역들을 동원하고 단합하여 물리쳐야만 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저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흔히들 “한국은 복 받은 나라”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지원도 받으면서 친교하는 ‘한미동맹보유’라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복을 받은 한국과 그 복을 받지 못한 북한과 어떤 역사와 현실을 간직하고 있는지 극명한 비교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이미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우리 동족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의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진실된 노력을 경주했어야만 했다.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미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역사를 전개한 남한과 중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역사를 꾸려온 북한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만 한다.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최빈국, 인권 면에서 세계 최악국, 정권속성 면에서 세계최불량성 정권 북한이라는 현실을 두고 깊은 참회를 해야만 한다. 세계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호가 북한을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만들었고 동북아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맹반성하는 일이 한국에 대한 고아적인 태도보다 먼저임을 깊게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은 북한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남한까지 미국진영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맹반성하여야만 한다.

한국은 하늘이 무너져도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미국진영을 이탈하여 중국진영에 기웃대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꽃다운 그들의 젊은이들 33,642명을 이 땅에서 희생시키었고, 123,905명이 불구가 되게 한 한국의 평생 보은국(報恩國)이다. 그 후 잿더미로 변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결정적인 원조와 지원들을 한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을 향해 부족한 것은 지원해주고 잘못된 점은 비판도 하면서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진실된 노력들을 해온 동맹국이다.

한국인들 중 지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친북적인 의식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 등의 구호를 주장한다. 미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대한민국 만복의 근원 미국”이라는 표현이 맞다.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국은 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 속에서 중국의 압박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셋째, 북한의 핵카드와 불량국가의 속성을 최대도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큰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호칭하면서 소중하게 대하였던 것은 중국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에 도움을 얻고 싶은 소망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기대를 중국은 자기들 국가이익에 활용을 해왔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효성성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았고, 남한도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놀림 당하였다. 북핵문제라든가 통일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조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추구해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통일문제를 중국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넷째, 미국의 최첨단 장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강요하는 중국의 태도는 그야말로 오만한 대국적인 의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교만한 행태다. 한국이 중국의 결재 받아 군장비 목록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산둥성 일대에 배치하는 중국군 장비를 두고 일본이나 미국이 고압적인 자세로 배치를 거부하는 행태를 중국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최첨단정예장비의 한국 배치는 주권국가 한국의 한국안보역량 증대조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1) 한국은 중국에 대해 당당함과 공세적인 자세로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이 그 원인’이라고 강하게 되받아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2) 한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복잡한 의존관계 (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로 안보이슈와 기타 다른 이슈를 구분하여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3)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가 싫으면 북한을 비핵화 시키든가, 혹은 비합리적인 북한비호를 포기할 것을 주장해야 하며, (4) 사드문제를 이용 중국이 정치화/이념화 시켜 한국 내 갈등고조를 시도함은 철저히 차단해야만 한다.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토론

[토론 ①]

중국의 한국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동맹의 무력화와 세계패권 의도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 문제 제기

최근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배치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직간접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 외교부 대변인 및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등 관영 언론매체들이 총동원되어 한국정부에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 한심한 것은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이 중국 및 북한과 궤를 같이하며 ‘사드배치 반대 3자(한-중-북) 연대투쟁’을 벌이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평소에 ‘자주(自主)’를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내세우던 이른바 진보 정치세력(친중-중북 편향세력)들이 한국의 안보는 도외시하며 중국과 북한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행위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폭거(暴舉)이다. 또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의 행태는 사대매국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 중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한국이 마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Missile Defense)체제에 편입되어, 중국이 ICBM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될 사드(THAAD) 레이더의 탐지거리(유효탐지 600km, 최대 탐지 1,000km)나 요격 고도(45-150km)로 볼 때,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즉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 범위를 벗어나고, 지상 1,000km로 추진하는 ICBM을 한국 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그래픽 뉴스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30/2016013000818.html

3.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

중국정부도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직접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총력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첫째, 한미(군사)동맹을 무력화하여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신(新)국방전략의 하나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채택하며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대(對) 중국 해징(Hedging)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국굴기’(大國(大國崛起),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우며 군사 및 외교, 경제역량을 강화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며 결국 중국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보유한 가공할만한 핵, ICBM 등 미사일과 지상군, 공군, 해군력을 감안할 때, 사드 배치로 중국안보가 위협받는다 인식은 소인배와 같은 처사이다. 또한 앞서 지적했지만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의 유효탐지거리나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을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을 기하려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세계에서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중국의 ‘신(新)패권주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부가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는 ① 혈맹이라는 북한입장을 옹호, 대변하여 중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위상인 ‘대미(對美) 전초 방패막’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②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③ 국내 친중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반미-친중(反美-親中) 통일전선’의 확대를 기하려는데 일조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

첫째, 우리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접근하고, 논란종식을 위해 조속히 연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드배치문제를 우리 의사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및 저지압력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폭거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중국정부에 대해 내정 불간섭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이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응하여 조속히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저의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국가인 것이며, 우리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최근 부각한 친중론자(親中論者)들에게 묻는다. 한국이 북한 및 제3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으면 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바로 미국이다. 한국의 안보위협에도 중국은 우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자 철칙이다.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외교의 다변화’ 운운하며 한미동맹 구도에 이익을 제기하는 자는 안보장치 무장해제론자이며 결국 반(反) 대한민국세력이다.

셋째,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친중론자)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한다. 자칭 진보적 지식인인양 행세하는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 전직 각료, 학자, 언론그룹은 종북세력과 함께 ‘신(新) 매국노 군(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 진보세력들이 우리사회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추적하여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면,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반문명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토론 ②]

사드 사태에 대해...

이 정 훈
신동아 편집위원

사드 사태가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만들고 있다. 이 투쟁을 보고 있노라면 공포심의 발현이 발견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자파의 위해성과 사드를 배치하면 제일 먼저 북한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주장한다.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감정도 바탕은 두려움이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두려움 대 두려움.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지는 대결의 본질은 이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같은데 해법은 180도 다르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세력은 ‘용감’을 선택했고, 반대하는 이들은 ‘비겁’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이 땅의 운동권이 부른 노래 중에 “홀라 홀라”를 외치는 ‘홀라송’이 있었다. 이 노래에는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라는 가사가 있다. 용기를 북돋는 가사이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란 가사와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란 후렴이 이어진다. 모두 용감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좌파가 많다. 좌파 운동을 할 때에는 이들은 이러한 노래로 용기를 강조했다. 그런데 성주에서는 비겁을 전파하고 있다. 내 목숨을 지키고 싶다는 두려움을 유포시켜 성주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해 핵미사일을 쏘는 북한에 맞서보겠다는 이들이야말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주저앉히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고 싶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용기인 것으로 꾸며내고 있다. 이는 비겁을 전파시켜 많은 주민을 현혹하는 사술(邪術)이다. 이 사술에 국방의 의무를 갖고 우리 국민의 일부인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걸려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민의를 대변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달려가겠다고 한다.

만물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지혜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에 두려움을 갖고 겸손히 사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 그러나 사술에 굴복하는 것은 비겁이다.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고 중국의 심리전에 걸려드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도부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드 사태에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외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뚜렷이 나타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 영토(南쿠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유럽에서처럼은 아니지만 미국 러시아 대립도 발견된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과 중국과 몽골의 대립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 그리고 북중군사동맹이다. 그런데 경제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것이 발견된다. 한중 경제교류는 한미, 한일경제교류보다 규모가 크다. 미중, 중일, 중-대만, 중-몽골 간의 경제교역도 적지 않다. 교역이 적은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만 좀 하고 있을 뿐 여타 나라와는 경제교류가 적다. 몽골도 작은 편인데 그나마 하는 무역이 북한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에 많이 경도돼 있다. 러시아 역시 극동의 비중이 작은 탓인지 활발히 무역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인 유대와 경제교역 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역사문제로 들어가면 다른 현상이 발견된다.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한중 간에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갈등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한일 과거사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

이러하니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보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가 불분명해진다. 가장 확실한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헛갈려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놓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으니 한국의 외교는 복잡해진다.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불편한 일본과 손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갑갑한 현실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역내 나라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무시도 당하지 않는 나라다. 동북아의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 다리 빠져 있는 러시아의 스탠스는 비교적 분명하다. 파위를 가진 대만의 스탠스도 상당히 분명하다. 이 3국, 혹은 4국, 5국이 만든 동북아 세력판도는 고정된 그림에 가까운 것이다.

이 판도가 중규모 파워인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주목해 한국이 중국에 기울면 일본이 화가 난다. 그렇게 된 일본에서 터져 나오는 시위와 현상이 혐한류(嫌韓流)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에서는 한류를 거부하는 반한(反韓)운동이 일어난다. 중국은 관제 데모를 할 수 있는 나라이니 반한시위를 일으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과 중국은 춤을 추는 것이다.

미국은 좀 다르다. 미국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사 사건으로 인한 반미 시위가 거세도 반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양키 고 홈은 한국 좌파 운동권의 고정 구호였다. 이를 펼치기 위해 광우병 미국 쇠고기 파동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슈퍼 파워이다 보니 하도 많은 반미 시위를 당해, 한국의 반미 운동은 그렇구나 하고 견뎌낸다. 한미 관계는 좌파들의 시위로 인해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다.

러시아나 대만 몽골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작은 편이다. 북한은 중북세력을 동원해 이따금 한국을 흔들어 놓지만 북한을 적으로 보는 한국의 스탠스는 좌파 정권 시절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

다면 한국의 선택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된다.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국이 미소를 띠고 사드 배치를 시도하면 일본이 희색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적어도 중일 관계에서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중 간에는 어려워도 일중 간에서는 균형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단과 주변 강국 때문에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할 수 없다고 본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덕분에 상당한 강국인 일중 관계에서 균형을 흔드는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나는 박근혜 정부로 본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는 친중이었다. 박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집중해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까지 해주면서 중국 편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 놓고도 4차 핵실험을 하고 ICBM급 발사체를 쏜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다. 중국은 배신을 한 것이다.

이를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응징했다. 총 한 방, 외교적 비난 한 번 하지 않고 사드 배치만 결정한 것인데, 이것이 중국 본토로 미사일을 쏘거나 시진핑을 저주한 것보다 더 한 효과를 내었다. 대국이라고 폄을 잡던 중국은 필리핀에게 패소한 것까지지 겹쳐지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중국 지도부를 위한 외교 전략을 뽑아 올리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험한류가 사라졌다. 방위백서는 상투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조야는 한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갖고 노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한국만큼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갖고 노는 것이 김정민의 북한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해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정리하면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동시에 세계 강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성격은 180도 다르지만 한민족은 세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균형외교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균형외교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약하면 제일 먼저 공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된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 맞서 주고 있다. 중국의 편을 드는 균형자가 된 것이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싫어도 한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뭉친 한미일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붕괴시키면 중국이 힘들어지니 중국은 결사적으로 북한을 보호한다. 그러나 명분이 적다. 그러한 보호가 지나쳐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중국은 더욱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힘의 축이 기울면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통일이나 통일로 가는 길인 북한 급변을 맞을 지도 모른다. 동북아의 현존 세력균형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다. 한국은 놀라운 외교로 강국을 흔들어난 역사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해 일본을 뒤흔든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해 세계를 놀라게 한 다음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60만 현대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외교를 펼쳤다. 친미주의로 알려진 그가 미국을 갖고 노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을 시도해 미국과 대립한 적이 있다. 월남에 파병하고, 한미연합사를 만드는 등 친미 일변도를 걸었지만 결정적인 시기엔 핵무장을 시도해 카터의 꿈인 주한미군 철수를 무력화하는 외교력을 발휘했다. 전두환 정부는 레이건 정부의 지지를 받아내 일본에서 60억 달러 차관을 받아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냈다.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전혀 해치지 않고 실리를 챙겨낸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김종휘 외교안보수석이 중심이 된 북방외교로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며 북한을 고립시켰었다. 그리고 등장한 YS, DJ,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주력해 미국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역시 주변국을 혼든 것이다. 그러나 세 정권의 외교적 역량은 이-박-전-노만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큰 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싸움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좌력 불비와 공포심을 조장해 대드는 좌파 세력으로 인해 고군분투 홀로 외교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다. 언제 대한민국 외교가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흔들려 보았나. 평화선을 내건 이승만은 일본만 흔들려 보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외교를 하고 있다.

성패에 관계없이 고군분투를 하는 그에게 응원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을 자극해 북한 선동에 놀아나게 하는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좌파가 아니라면, 외부세력이 자극하는 두려움에 젖어 부화뇌동하는 비자주적 국민이 아니라면...

[토론 ③]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목표와 사드의 유용성

김 정 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북한은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인 2013년 4월 헌법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는 이것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핵·경제병진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오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원화되고 있다. 북한이 왜 이같이 체제붕괴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군사적으로 왜 유용성을 갖는지 논술하겠다.

2.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 목표

1) 대내적 전략 목표

첫째, 핵무기 보유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업적으로 제시하여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통해 남조선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북한 군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김씨 왕조의 통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다. 남한과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일거에 군사력 열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체제를 지탱하려는 전략이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군의 전비태세가 형편없어 전쟁발발 시 제대로 전투를 할 수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 외침을 막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무장으로 보유로 절감된 군사비를 민수부문으로 전용해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논리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재래식 군비를 절약하여 남는 재원으로 경제부문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대외적 목표

첫째,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의 제재국면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술책이다.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대량으로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다. 주한미군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과 미 본토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한 지역으로의 후퇴를 미군 당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군이 무력도발을 해도 주일미군과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국지전 도발을 해도, 한·미군이 평양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해도 한국군이 원점을 타격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되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북한군은 대남도발에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어수단이 획득되기 전에는 북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6자회담 등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핵무기의 추가적 증강문제와 해외 핵 확산문제’를 의제로 하여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고, 대미 수교 등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핵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 반미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3) 대남 목표

첫째, 핵무기를 보유를 통해 우리 군의 김정은 참수작전 등 최고지휘부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미 측이 선불리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 없게 하려는 저의이다.

둘째, 전면전을 감행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여 소위 ‘7일 전쟁’ 또는 ‘3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남갈등을 일으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대규모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한 대남 갈취 행태를 보일 것이다.

넷째, 핵무장으로 북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내 종북주의자들의 친북활동과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고무 추동하기 위함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북한체제가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북활동을 하는 고정간첩과 국내 자생적 극렬 좌경분자들에게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 언제라도 남조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대남 적화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3.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계획

현재 한국군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극히 제한된다. 현재 북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인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사거리가 40km로 짧아 방어지역이 제한된다. 우리 군은 2023년까지 길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능력이 구비될 때까지는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드를 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SLBM이 2-3년 내 실전 배치⁴⁴⁾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우리의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한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개념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래 보장받고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고 위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2009년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자행하여 안보위협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을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이 태동했다.

44)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핵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⁴⁵⁾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탐지, 방어, 교란, 파괴(4D)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라고 한다.⁴⁶⁾

한미 양국은 2015년 4월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 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동년 4월 16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4D 개념을 속전속결 식으로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다.

탐지(Detect): 정보 감시 정찰자산을 운용하여 방어 교란 파괴 노력을 지원

방어(Defense): 우리 측의 피해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소극적 방어 시행

교란(Disrupt): 북한 미사일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파괴(Destroy):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및 지원 자산에 대한 공격

4D 작전 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ISR)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과 정확도 등의 위협을 줄이도록 미사일을 운용하는 지휘 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고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말한다.⁴⁷⁾

2) 킬체인(Kill Chain)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 정찰능력도, 타격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향후 이를 갖추어 나갈 계획만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⁴⁸⁾

○ 한국군은 감시 정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

○ 북한 전역에 있는 핵 미사일 관련 고정 및 이동시설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신속하게 타격

45)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56-57.

46)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57.

47)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48)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58.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예정

이를 위해 현 지대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파괴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확보하여 전투기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해상 기반 타격능력도 증강할 계획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2015년 4월 20일 연합뉴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천억 원 증액.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kg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천억 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천억 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천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은 2008년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2 요격미사일 2개 대대를 구입하였다. 해상 함정에는 SM-2 요격미사일을 신형 구축함에 장착하였다.

현재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조되자 한국은 2012년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를 2식 구입하고, 2016년까지 단거리(종말단계 하층방어) PAC-3 요격미사일을 획득하기로 하였다.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위한 THAAD나 SM-3 요격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MD체제 편입의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국의 한반도 배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KAMD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⁴⁹⁾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조기 경보체계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한다.
 -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우리 군은 요격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탄도탄에 대한 방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요격 거리가 향상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2020년대 중반⁵⁰⁾에 배치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구축될 KAMD 체계⁵¹⁾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 미측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전력도 북한의 TEL 파괴에 가세하게 된다. MD 전력으로는 탐지거리 1천km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⁵²⁾

4.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한 이후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핵폭탄의 피해를 입은 이후 미국이 대량보복을 실행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니트맨-Ⅲ를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태평양 상 섬으로 두발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 일본 등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가 초도화된 이후 북한에 대해 확증파괴를 실시할 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킬체인을 완성하여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동식 발사대를 200대나 운용하고 있어 표적을 실시간에 감시할

4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58-59.

50) 2014년 국방백서에는 KAMD구축 시간을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으나 2015년 4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는 2020년대 초반으로 설명.

51)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52)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킬체인을 완성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하층 중층 상층의 3단계 다층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요격 시간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舊형 PAC-3는 요격고도가 15-20km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1초에 불과하다. 아무리 유능한 대탄도탄 미사일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1초의 대응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걸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km의 고고도이므로 요격기간이 43초 이상이다. 43배 대응 시간이 길다.

2) 명중률

한국군의 PAC-2와 주한미군의 PAC-3는 모두 4발 미사일로 1기를 구성하고 있다.

PAC-2는 첫발에 명중률을 40%, PAC-3는 60%라고 한다. 2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면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PAC-3는 두 번째 미사일이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PAC-2는 두발 째 명중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4발 모두 쏜다면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사드는 첫발에 76%의 명중률을 자랑한다. 특히 대기권 밖 90km 이상 상공에서는 명중률이 99%에 이른다.

3) 미사일 속도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경우 하강 속도가 음속의 6-7배에 이른다. PAC-2나 PAC-3는 음속의 4-5배 속도에 불과하여 노동미사일의 하강 속도의 60-70%에 불과하다. 특히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하강시키면 대기권 밖에서 음속의 14-15배, 대기권 진입 후 음속의 10배속으로 하강한다. PAC-2나 PAC-3로는 속도가 2.5배에 이르는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드는 요격 속도가 음속의 8.25배에 이른다. 무수단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도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

4) 방어 범위

PAC-2나 PAC-3는 요격고도가 15-20km, 최대 사거리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30km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사드는 최대 사정거리가 200km에 이르러 1개 포대가 대한민국 영토의 2/3를 방어할 수 있

다. 방어 범위만으로 보면 PAC-2나 PAC-3 수십 개 포대가 있어야 사드만큼 유효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아산이나 농촌 지역을 방어 범위에서 빼고 계산한다면 사드가 PAC-2나 PAC-3에 비해 10개 포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향후 군사적 대응 방안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를 PAC-3로 조기에 격상시키고, 미국의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구형 PAC-3를 신형 PAC-3(요격고도 40km)로 교체하는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완성되는 2023년까지는 미국의 사드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다.⁵³⁾ 우리의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드는 유용성을 갖는다.⁵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PAC-3 64기만으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는 기회 밖에 없다. 이 요격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영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40~150km의 고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2차례)가 생기므로 우리 영토는 그만큼 더 안전해 진다.⁵⁵⁾

그런데 미국의 사드 1대 포대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가 없어 2~3개 포대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⁵⁶⁾ 그리고 북한이 SLBM를 2~3년 내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3) 북한은 2014년 7월 9일 새벽(4시와 4시 20분 경)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비무장지대에서 40여km 떨어진 황해도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했고, 이 미사일들은 500여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군이 미사일 기지에서 20~30여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시켜 발사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13일 새벽(1시 20분과 1시 30분 경)에도 비무장지대에서 20여km 떨어진 개성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5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놓았다가 발사한 뒤 장소를 옮겨 숨기는 행태를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였다.

54) 우리의 장거리 요격미사일의 요격고도가 70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55) 북한이 2014년 한 해 동안 동해안으로 총 9회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130~150km였고, 이때 비(飛)거리는 250~650km로 측정되었다. 이 때 북한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기도했다. 1,300km 사거리의 노동미사일을 650km 거리의 표적에 쏘아 고고도로 비행하게 한 후 급격히 낙하시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56)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200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발사 능력이 200발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물론 우리 미사일 전력과 공군력에 의해 상당한 숫자의 발사대가 발사 전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해안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가 120-130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한 사드 레이더는 남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발사된 SLBM을 탐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SLBM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배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에 1조5천억 원 정도하는 고가라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잠수함⁵⁷⁾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⁸⁾ 이 문제는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호주 사례)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공격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방어능력 확충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제재명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도 한미 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한미동맹에 변화가 오거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독자적 핵 보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57) 2018년 3000톤급 잠수함 2척은 전력화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실전배치. SLBM용 수직발사대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은 2027년까지 9척 건조. 원자력 잠수함 건조계획은 없음.

58) 노무현 정부 때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으나 우리의 우라늄 농축문제가 불거져 없는 것으로 무산되었다.

